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3]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25 시리즈기획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1] 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2] '에코 투어리즘'이다
[3]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다
[4] 가벼운 만남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5] 마을공동체의 답은 돌봄 민주주의다
[6] 이주민 돌봄이 다문화 사회를 이룬다
[7] 지역 애착'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 귀촌, 귀향을 위하여
[8]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찾아
[9] 마을교육 공동체가 거버넌스의 리빙랩이다
[10] 풀뿌리주민에서 세계시민으로: 한국과 동아시아가 마주한 과제

1. 삼농三農정치와 풀뿌리 세계시민

이번 시리즈는 '선진국은 농업국이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2025년 한국 사회, 특히 농촌 지역은 어디로 갈지 모른 채 흔들리고 낙망한 상태다. 안팎에서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크라시algocracy의 습격 하에 이기적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 이런 상황은 지역에 상관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기적 개인주의는 인권이 아닌 이권만 챙기는 이익집단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들은 공익을 가장한 채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면서 이권을 독점한다. 그 결과 개인은 자신을 사적 공간에 가둔 채 타자에 관한 관심은 물론 접촉을 꺼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만 연결한다. 이른바 '반反사회적 세기'anti-social century가 도래하였고 우리는 별 문제의식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제 한국이 마주한 위협 즉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디지털 플랫폼 경제 부상, MZ세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 등은 한국 사회를 조여오고 있으며 그 여파는 농촌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장소와 사람이다. 풀뿌리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안을 궁리하고 합의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풀뿌리 세계시민이 절실한 것이다. 모든 답은 풀뿌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누구나 농촌에 내려가 보면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소위 '삼농(농업-농촌-농민)'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농업국이라는 명제를 정부 관료나 정치인은 무시한다. 선거 국면에서나 표를 얻기 위해 농민에 귀를 기울이는 척한다. 이제 기업과 시민사회도 삼농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농가 수는 100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며 있으며 농민은 208만 명을 유지했지만 곧 2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사실 스마트 농업을 주창하는 정부 농업정책을 보면 '100만 명 정예 농민 유지'라는 원칙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한시적이지만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2022년부터 매년 1조(7년간 총 7조 원)를 쏟아붓고 있다.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정책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기업 역시 농업, 농촌,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다문화 가족 지원 및 모국 방문, 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민 자녀 장학금 지급, 농업인 의료지원 등과 같은 시혜성 농민 복지사업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최근 북유럽에서 진행된 '사회적 농업' 정책은 삼농 정치와 연관된 주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농촌의 다문화 가정의 돌봄 문제를 로컬푸드 생산 및 판매 활동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나 국제결혼 배경의 청년이 주도하는 다문화 가정 노인 돌봄 사업은 사회적 농업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2018년부터 진행된 사회적 농업 관련 지원사업 역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통합적 접근, 즉 농민을 농촌의 주체로서 스스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 주민으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단순히 수동적 시혜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을 전수하고 농촌을 아끼고 함께 가꾸는 농민으로 존중하기보다는 고령의 노인으로 곧 농촌에서 사라질 존재로 돌봄을 받아야 할 복지 수혜자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 농촌 지역에서 과속으로 진행된 정부 주도 혁신사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로컬푸드, 마을공동체, 사회적 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삼농 정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정 각종 사업이 혁신을 추동한 것인가 아니면 혁신을 막은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농민 스스로 기획한 혁신은 결코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협력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 관련 혁신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민은 능동적 주체가 되기보다는 보조금을 타 먹는 시혜의 대상 즉 농민의 수동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은 절대 간단치 않은 영역이며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이라는 개념에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차원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장애와 도전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품고 그들을 돌보고 함께하려는 농업, 농촌, 농민의 길은 전혀 쉽지 않다. 삼농의 정치 측면에서 한국 농촌 지역이 과연 사회적 농업을 수행할 토대가 충분하였는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생략한 채 서구적 개념과 방법론을 위로부터 동원한 측면이 없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적 농업을 비롯한 많은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풀뿌리 단위에서 많은 갈등을 초래했고 각각의 사업은 끊임없이 흔들거리면서 힘들게 유지되어 왔다. 능동적 농민으로서 농촌 주민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시 정공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민과 정부 그리고 농촌 주민 모두가 철저히 고민하고 상호 토론을 통해 풀뿌리에

서 필요한 것을 아래로부터 제안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것이 삼농 정치가 회복되는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을 촉구하고 소통의 메신저가 되고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풀뿌리 세계시민이다. 그는 지역 주민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고 그것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메신저이다.

이번 호에서는 전북 임실군 사례와 일본 도야마현 가미이치上市 마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고자 한다. 그들이 농촌에서 삼농 정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혁신적인 분투의 기록을 통해 동아시아의 삼농 정치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보조금 딜레마 벗어나기: 임실 풀뿌리 세계시민, 김정흠의 사회혁신 분투기

(1) 시민사회 영역에서 제도정치로 그리고 다시 풀뿌리로의 순환 연결

김정흠 임실군 기초의원(이하 김 의원)을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전주가 고향인 그는 1994년 임실군 성수면 당당리로 귀농해서 임실군 농민회, 한우협회, 그리고 임실 치즈마을 작은도서관장 등의 풀뿌리 활동을 하였다. 귀농 후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세 딸의 아버지로서 삼농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며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살고 있다.

2022년 그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선거에 출마하여 첫 도전임에도 제도정치 입성에 성공했다. 사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열정을 다해 지역에서의 변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였다. 긴 호흡을 갖고 시도한 시민사회 활동보다는 좀 더 영향력과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제도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김정흠 의원이 풀뿌리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 계기는 2008년이다. 그의 삶의 목표에 퍼즐을 맞추게 한 핵심 단어는 '기후변화'였다. 당시 42세로 김 의원은 당시 떠오른 단어가 생명이었고 그 생명을 연결하게 한 핵심 개념이 '기후변화'였다. 그는 임실 중금마을에서 지속가능발전,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과 자원순환 등의 활동을 시작하고 임실군과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진행하였다. 돌아보면 그 과정은 김 의원이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 임실이라는 풀뿌리에 가벼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삼농 정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궁리했고 주민을 설득했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숯 지구적으로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안타깝게도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변화는 생각보다 느리거나 심지어 변화를 거부하

풀뿌리세계시민 김정흠 임실군의원. 사진=김정흠

기까지 한다. 풀뿌리 단위에서 아직도 신뢰와 소통의 관계보다 이권에 따른 편 가르기와 연줄 정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주민은 능동적 실천과 혁신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수동적 시혜자로 거리두기 전략을 취하곤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한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등이 모두 이런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마을 만들기, 마을 복지도 지역 주민 스스로 복지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스로 복지 혹은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의존한 사업은 대체로 주민을 점차 무능한 주민 혹은 시혜만 쳐다보는 바보로 만든다.

이처럼 주민 스스로 복지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아래로부터의 참여 기제를 전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보조금 정책은 농민 혹은 농촌 주민을 보조금에 종속시킨다. 심지어 더 많은 보조금과 지원을 받기 위한 지역 주민 간의 갈등 구조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김 의원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풀뿌리로부터 사회혁신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구체적인 혁신적 실험을 제안하고 있다.

김 의원은 풀뿌리 시민사회에서 시작해 제도정치로 3년을 보냈다. 그는 더욱 근본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풀뿌리 차원의 정치후원회를 조직하였다. 풀뿌리 차원의 시민정치가 살아 움직여야 풀뿌리에서의 사회혁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우는 협치가 살아 숨쉬기보다는 호흡기를 달고 있는 형국이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지자체장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고 있다.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떡고물을 나눠주며 여론을 조성한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풀뿌리 주민이 시민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우선이다.

김 의원은 풀뿌리의 변화를 추동하고자 다시 노력하고 있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 진영과 연줄을 넘어서 다양한 임실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민사회 포럼을 꾸리는 작업이 우선이다. 풀뿌리 시민의 힘으로 지역혁신을 이끌어 보자는 일종의 마라톤 같은 시민문화 정치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가운데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 발굴될 수도 있고, 혹은 풀뿌리 주민을 섬기는 리더십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수평적 리더십이 발굴될 수도 있다.

요컨대 김 의원은 풀뿌리 지역 주민으로서 대안 찾기로 시작해 제도정치 영역으로 이동한 후 다시 풀뿌리 시민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순환적 연결 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풀뿌리에서의 사회혁신 실험이다.

(2) 협치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관리 방식만 작동 중

한국 지역사회에서 주민 참여는 잘 되고 있는가? 풀뿌리 세계시민에게 던지는 공통 질문이다. 김 의원의 임실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그는 단호하게 "임실의 거버넌스는 없다"라고 선언한다.

기후변화에 주목하여 그는 2008년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협치가 매우 중요함을 직시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2009년부터 임실 지방의제 운영위원장으로, 2013년에는 대표로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행정이 협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음을 확인했다. 물론 농촌 지역 주민의 기후변화 일반에 대한 이해와 스스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의제 활동에 반대하는 반反운동 세력counter-movements, 즉 보수 이익단체가 강화되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행정에 순응하면서 반대급부로 특혜를 독점하는 '줄서기 행정'을 초래하였다. 임실군도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별히 행정 관료 출신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군수로서 3선까지 이어가면서 그를 비판하는 견해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시혜적 관리가 잘 되고 있기에 협치는 불필요

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사실 협치governance의 개념에는 많은 내용과 특성이 담겨 있다. 우리는 종종 협치 앞에 '좋은good, 수평적인horizontal, 민주적인democratic, 책임 있는accountable'과 같은 형용사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다. 협치의 특징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속성이지만 이를 강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특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초자치단체장이 강한 연줄망을 동원하거나 지방 교부금을 통해 2만5000명의 임실군을 보이지 않게 관리 혹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임실군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한 수탁사업이 무려 연간 50건에 이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관리 방식이 작동하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돈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지방 수탁사업은 기득권 및 토건 세력과 이권단체가 독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풀뿌리 차원의 혁신과 도전적 실험이 아래로부터 쉽게 나오지 않게 된다.

일례로 임실은 고추가 유명하다. 완주의 생강처럼 임실도 고추를 농업 유산으로 인증하여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켜내고 있는 지역 농산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켜내자는 제언을 한 적이 있다. 행정은 이런 제안에 시큰둥하다. 그럼에도 WTO 체제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지킨 임실군의 고추 작목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확장하고 유통을 보다 체계화하여 고추와 관련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는 혁신적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중앙의 지원금에 안주하며 주변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머물고 있다. 협치가 부재하기에 풀뿌리 혁신은 반복적으로 좌절되고 있다.

후원회원들과 함께. 맨왼쪽이 공석기 교수, 오른쪽끝이 김정흠 의원.
사진=공석기

(3) 지역 회복 프로젝트의 현실: 남은 것은 건물뿐

한국 농촌의 풍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푸른 논과 밭이 이제는 비닐하우스와 태양광 발전 패널이 가득한 곳으로 변한 지 오래다. 벼농사로 농민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쌈 채소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로 생태환경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태양광 발전 설치가 적절한 통제 없이 확장된 결과이다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마을 단위에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어떤가? 풀뿌리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주민들은 "사업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아 있다"라고 냉소적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각종 보조금 사업의 비전과 목표가 삼농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사업 성과만을 주목하였다. 그 사업은 과연 농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려는 것인가. 대부분 사업이 농촌과 농민을 주변적 지위로 밀려나게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을 보면 임실군은 상위권에 들어간다. 평균 10억을 했다. 치즈마을이라는 브랜드보다는 공직사회의 혈연과 지연 연줄로 가능케 했다. 이것이 강하게 작동했다. 임실 공무원이 동원되어 실적주의로 작동한 것이다.

2019년에 시작한 지역서비스 공동체 사업 이후 농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교육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가 동일한 농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기획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사업이 끝나면 시설만 남는 형국이다. 농촌 기초거점 시설과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농민의 삶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지만 지역 주민은 과연 어느 정도나 각 사업에 대한 이해 속에서 참여하는지가 궁금하다.

김 의원의 답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이 종료되면 남는 것은 건물뿐이다. 농촌 정주권 활성화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건물만 남고 사용하지 않으니 건물 내에 거미줄이 처지고 있다. 그래서 운영 실태를 조사하면 이미 종료된 사업에 관한 지자체의 관심이 지속되지 않고 건물만 남게 되는 것이다. 보통 그런 사업이 수십억에서 백억 대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것은 임실군만의 실정이 아니다.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농민에게 백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 김 의원은 성과도 없는 10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에 농민 혹은 농촌 주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강조한다. 사실 농민은 꼭 필요한 시기에 수당을 받으면 기분도 좋고 서로 밥도 사주면서 만남을 늘려간다. 연말이 되면 농촌 마을에 활기가 넘친다. 실례로 농민수당 60만 원과 공익수당 120만 원을 받는 12월과 1월이 되면 임실 지역에 생기가 돌고 재미있는 행사도 많아진다. 주민 간에 밥 먹는 만남의 시간이 늘면서 관계성도 더 돈독해진다. 그 가운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상호 협력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게 된다.

기본소득이 풀뿌리에서 불러오는 소소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예산 집행에서의 도덕적 해이나 복지 낭비를 초래한다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농촌 여기저기에 텅 빈 건물이 주민에게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사업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수많은 지원사업의 목적이 농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결국 건물만 남고 농민을 주변에 머물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농민은 지쳐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이 풀뿌리 주민의 사고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골 할머니도 정부 지원사업을 보면서 "이거 뜯었다 붙였다 해야 우리 자식도 거기에서 밥 벌어먹지"라고 말씀하신다. 하드웨어 중심의 토건 발전주의가 지역 주민의 생계에 보탬이 된다는 잘못된 사고가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 주민도 비록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사업을 비판하지만 동시에 그 이권에서 소외될까 봐 어쩔 수 없이 행정에 줄을 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를 넘어서는 혁신과 도전적 실험이 풀뿌리 세계시민으로부터 추동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물이 아니라 주민에게 생기를. 사진=김정흠

(4) 사회적 농업과 돌봄을 연결하는 혁신적 실험 제안

농촌의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 독거노인 돌봄에 대한 지역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소중하고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면서 마지막 순간은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돌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서둘러 노인들을 요양원에 보내고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마주하는 현대판 고려장이 늘고 있다. 정부도, 가족도 이 문제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역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식품부가 주도한 사회적 농업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의 사업과 중첩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을 구현할 능동적 시민은 사라지고 이제 농민 혹은 농촌 주민은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지방정부의 부서도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농촌사회복지과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돌봄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농업에서 방점은 '사회적' 개념에 두고 있다. 귀농과 귀촌을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농민 혹은 주민으로서 능동적 참여를 추동하기보다는 농촌 구성원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시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지역특산품 임실고추로 만든 김장김치. 사진=김정흠

이런 맥락에서 김정흠 의원의 사회적 농업과 돌봄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융 · 복합마을 연립주택' 프로젝트는 혁신적 실험으로 주목된다.

시골 마을은 대체로 20~3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50~60세 가구주는 5~6가구, 나머지는 1인 노인 가구이다. 독거노인이 해마다 빨리 사망하고 있어 마을은 곧 공동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 속도를 낮추고 대안을 찾고자 10~15개 가구가 함께 사는 원형 형태의 단층 연립주택을 짓자. 공동시설로 목욕탕, 식당, 다목적 공간(회의실, 운동실)을 갖춘다. 각 가구는 15~18평 규모로 10~15개를 만들어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다. 한 장소 내 돌봄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사가 매일 마을을 방문하여도 돌봄을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방문 약속을 해도 부재 경우가 많다. 어르신의 영양 관리 및 건강 관리, 자녀와의 소통으로 돌봄 내용을 공유하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옛 주택은 새로운 귀농 귀촌인에게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할 수 있다. 혹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고자 하는 자녀에게도 이 제안은 매력적이다. 은퇴 후 부모님이 사용하던 연립주택 소유권을 인계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다. 물론 이주 전이라도 임대권을 양도받아 귀농 귀촌인에게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은퇴하고 그곳으로 언제든지 이주할 수 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자녀는 부모의 고향으로 들어와 가족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마을의 존속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함께 거주하는 주민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 돌봄을 구현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흠 의원 '5분 발언' 재구성, 2023년 7월 24일)

돌봄에서 장소는 중요하다. 돌봄은 접촉이고 관계성에 기초하기에 구체적 공간에서 함께 돌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핵심 가치이다. 사실 “접촉 없는 돌봄은 꽝이다”. 주목할 점은 넓은 지역을 통합해 하나의 거점으로 연립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마을 속에 연립주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마을 내에서도 내가 익숙한 집을 떠나 연립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에 주저할 주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돌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마을에도 정치가 존재한다. 마을주민은 서로를 돕고 돌볼 것이라 상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로를 챙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마을에서도 오랜 삶 속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왕따와 따돌림이 빈번하다. 몇몇 주민은 마을에서 배제되고 외로움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외로움과 배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마을 단위 공동 주거 장소를 통해 농촌 어르신끼리 존중의 자세로 상호 돌봄을 풀뿌리부터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돌봄이 구현되면 그 마을의 생기는 다시 돌고 외부로부터의 이주는 증가할 것이다. 이주민은 이러한 돌봄을 배우고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혁신적 실험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 아파트 건설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실례로 임실 읍내에도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 입주자 70~80%가 임실 주민임이 확인되었다. 다수가 시골에도 집이 있고 읍내에도 집이 있는 상황이다. 시골에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놓고 읍내 아파트로 들어온 경우인 것이다.

마을 단위로 계속해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몇몇 마을주민을 위해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는가?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배정하고 동시에 소수의 주민만 사는 마을의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지방의 작은 마을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되고 있다.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동시에 돌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풀뿌리 차원의 통합적 대안이 절실하다. 이런 견지에서 장소, 접촉, 관계성 회복을 통해 지역 회복력을 제고하는 ‘마을 연립주택 공간’은 풀뿌리 차원의 새로운 도전이고 혁신적 실험이다.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임실 풀뿌리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동의 몫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마을중심 돌봄 공동체. 사진=김정흠

3. 지역 회복력의 미래: 풀뿌리 세계시민, 시니이치 도코로의 귀농 실험

(1) 가미이치에서의 친환경 농민으로 도전

시니이치 도코로Shinichi Tokoro는 도쿄 근교에서 자란 도시인이다. 그가 2022년 도야마현富山県 가미이치上市로 아내와 아들과 함께 귀농했다. 그는 도야마현을 걸쳐 펼쳐진 북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너무 좋아했다. 자신의 삶을 생태 보전과 농업을 연결시키는 친환경 농부로 살기로 결단하고 가벼운 마을공동체를 꿈꾸며 가미이치로 이주한 것이다. 귀농한 지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내와 7살 아들 모두 가미이치로의 귀농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그가 가미이치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을 항상 동경했기에 대도시에서의 삶을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원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긴 것은 돌아보면 미국 아리조나 대학University of Arizona에서의 약 4년의 유학 생활에서 시작되었다. 시간날 때마다 주변의 산을 즐겨 찾았고 미 서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산과 강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중에 친환경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벗 삼고 싶어 30여 나라를 찾아 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행 광이 되었다.

물론 도쿄로 돌아온 이후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꿈을 잠시 접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책방에 전시된 산 관련 잡지를 보면서 산과 강을 찾

'일본의 북알프스' 도야마현의 아름다운 자연. 사진=시니이치 도코로

은 여행가의 로망이 다시 샘 솟아 일본의 아름다운 산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사는 귀농과 귀촌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좋아해 여행을 우선시하다 보니 결혼 적령기도 넘겼다. 2017년 결혼 후 귀농 후보지로 일본의 도야마 지역과 시즈오카 두 군데를 놓고 고민하였다. 도쿄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교통편이 중요했는데 도야마는 2015년에 고속철도(신칸센)가 개통되어 도쿄와 더욱 가까워졌다. 또한 도야마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다.

도코로 씨는 항상 파타고니아Patagonia 관련 기어를 갖추고 있다.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친환경 보전을 회사의 비전으로 삼는 파타고니아의 기업 가치에 매료되어 관련 상품의 팬이 되었다. 사실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개념 있는 '사회적 소비자'social consumer로서가 아니라 진정 산과 강을 사랑하고 친환경의 삶을 최고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파타고니아 명예 직원처럼 그곳에서 생산한 각종 등산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다. 그의 생태적 가치와 태도가 도야마현 가미이치 마을로 귀농을 결심하게 만든 것이다.

귀농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다. 많은 귀농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부가 농촌, 농업, 농민 즉 삼농에 대한 관점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도코로 씨의 아내는 귀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그녀는 삼농에 대한 같은 관점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귀농은 쉽게 진행된 것이다. 사실 그녀는 도쿄에 있는 NPO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남편의 가미이치 농부로서의 도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녀의 응원과 도움으로 도코로 씨는 풀뿌리 세계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농부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귀농 가족이 빈번하게 마주하는 도전은 자녀의 교육 문제다. 그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사업을 지원하는 큰 규모의 중간지원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본 사회도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은둔형 청년 문제를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녀의 문제임을 깨닫고 글로벌 경쟁체제로 빨려 들어갈 아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가미이치로 귀농을 결심한 것이다. 다행히도 재택근무가 허용되어 경제적 수입원을 유지한 채 가미이치로 이주할 수 있었다.

도코로 씨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농사에 대한 경험이

도코로씨 가족의 모습. 사진=시니이치 도코로

도코로씨와 이나바씨의 협업. 사진=공석기

전무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농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생태가치를 보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것으로 농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농촌에서 농민의 삶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그가 가미이치에서 농민으로 홀로서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가 가미이치 삶에 만족하고 농촌 커뮤니티로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미이치 정부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가미이치 원주민 즉 농민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원주민 농민과의 상생적 협력: 가벼운 공동체 전략 실험

도코로 씨가 가미이치에 정착하기 위해 활용한 전략은 약한 연줄weak ties 확장 전략이다. 그는 내부자로서의 원주민 농민과의 만남과 외부자로서의 이주민 커뮤니티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특별히 가미이치 마을은 이주민을 수용하는데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이주민 유입에 적극적이다. 도코로 씨도 가미이치로 귀농한 이후 3년 거주 경험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자평한다. 그 이유는 원주민 농민으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매우 저렴하게 임대받아 보리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리 수확만으로 큰 수입을 올릴 수 없어서 보리를 이용한 스콘scon을 배우고 있으며 차후에 디저트 카페를 시내에 오픈하는 것도 목표이다. 이처럼 친환경 농사를 통해 직접 수확한 보리로 빵을 만들고 그것을 직접 카페에서 판매하는 친환경적 먹거리를 구현하는 것이 그의 꿈인 것이다.

귀농 3년 차 이주 농민이 어떻게 이러한 계획을 야심 차게 내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가미이치에서 3대째 농사를 이어가고 있는 원주민 이나바稲葉 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와의 협력이 원주민과 이주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원주민까지 이주민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여느 마을과 분명 다른 모습이다.

이나바 씨는 부모의 부유한 농업을 이어가는 2세대 농장 주인이지만 부인과 함께 다양한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식품 개발과 직거래 판매와 홍보 등은 아내의 혁신적 노력으로 가능하다. 도코로 씨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협력 활동은 그에게도 시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모에게 큰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모르지만 이나바 씨의 두 아들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농업을 자기 직업으로 삼겠노라 선언하였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나바 씨는 왜 이주민의 귀농을 지원하는가? 그는 대학 진학 때문에 가미이치를 떠나 나가노에 있는 통신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이후 부모가 이룬 농장을 가업으로 잇고자 귀향한 사례이다. 외부인으로서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누구든지 가미이치 마을이 좋아 이주하고 농사를 짓겠다면 적극 환영하고 지원하게 만들었다. 물론 가미이치 마을의 노인들은 아직도 외부인의 농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고 있다.

가마이치의 귀농귀촌 커뮤니티. 사진=시니이치 도코로

또한 도코로 씨는 가미이치시市로부터도 지원받은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미이치시의 후원으로 대나무 죽순 재배 및 가공품을 만드는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데 규슈로부터 죽순 재배 및 판매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미이치시는 놀랄만한 수준으로 외부인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외부인의 가미이치로의 이주에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분위기가 도코로 씨가 가벼운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기초위에서 도코로 씨는 비슷한 시기에 가미이치로 이주한 5가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어떤 가정은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고, 어떤 가정은 농장을 운영하고, 어떤 가정은 디저트 카페를 준비하고 있고, 몇몇 가정은 생태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도코로 씨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카페 오픈을 몇 년 연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차적으로 이동 카페 차량을 올해 중에 시작할 계획이다. 자기 소유의 픽업트럭을 개조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생적인 부엌 시스템을 갖춘 공유 부엌shared kitchen을 도야마시에서 찾아야 하고 빵을 굽기 위한 레시피recipe 개발과 요리법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친환경 농업, 원주민과의 협력 구축,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디저트 카페 운영 등은 농촌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전적 실험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도코로 씨는 도야마 지역에서 같은 비전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혁신은 홀로 작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연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위한 작업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지속적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그룹 참여자는 함께 궁리하면서 상호 소통과 신뢰가 쌓이고 시행착오도 같이 공유하면서 연대감을 형성한다.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지속될 때 원주민과 이주민이 연결되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은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이다. 도코로 씨가 추진하는 혁신적 실험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태이다.

요컨대 농업과 관련한 농민의 사회혁신은 기술혁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멋진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아니다. 농민과 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적 도전이 중요하다.

일본 가미이치로 귀농한 도코로 씨의 농민으로 홀로서기는 농민은 단순한 지원을 받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실험을 추동하는 능동적 풀뿌리 세계시민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만나겠지만 도야마현의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친환경 생태주의자 농민의 자립 과정은 자연만큼 아름답고 부럽다.

도코로 가족의 가을걷이. 사진=시니이치 도코로